

# 하남 이어 본촌도…광주 산업단지 지하수에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TCE 다량 검출돼  
규제 도입 이전 화학물질 원인  
전문가 “오염 확산 억제 조치를”  
시·북구, 전담팀 등 대책 마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466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북구 본촌산단 지하수에서도 동일한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광주가 충격에 휩싸였다.

전문가, 환경단체들은 행정당국의 미비했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시와 구는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한 본촌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실태조사에서 총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옛 로케트건설지 부지와 호남사니부지에서는 각각 기준치의 9배, 11배에 달하는 고농도 TCE가 검출됐다.

TCE는 금속 세정제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화합물이다.

하남산단에서는 2급 발암물질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발견됐다. PCE는 세탁 용제, 정유제 등 축매제, 기타 금속 세정용 화합물이다.

이같은 수질오염은 1980~90년대 환경 규제 도입 이전 사용된 산업용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양수처리 공법을 통한 지하수 정화와 오염 차단 방안이 제시됐으며, 필요 예산은 54억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북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화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고, 지난 2021년 9월 보조관측망 1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그쳤다. 이 관측망은 수위, 수온, 오후 전기전도도만 측정 가능하다.

지역 환경단체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지하수 검사가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수 오염이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미비했던 후속 조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석희 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본촌산단 지하수의 TCE 오염은 주민들과 노동자의 건강 위험 및 환경상의 잠재적 피해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및 환경 당국이 대책을 수립 중인 만큼 향후 정

화 작업 추진과 오염 확산 억제 조치의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기술적·재정적 이유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정화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등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화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구는 올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 실시하는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에 본촌산단이 포함돼 있다며, 연말 발표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광주시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건의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광주시도 하남·본촌산단 지하수에서 유해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 오염조사 및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구성 등 중·단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고유사무인 생활·농업·공업용 등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실태조사, 오염조사 및 오염방지명령과 정화사업 등의 행정조치를 자치구가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 정밀조사 긴급용역 착수와 지하수 오염 대책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긴급 구성 운영을 통해 지하수 모니터링 방안, 수질개선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 지적장애인 몸에 방뇨·침 뱉은 20대 광주지법 “반성 부족” 징역 1년 선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

(25)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두 차례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으나, 글씨체와 내용이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유철 기자

## 유령법인 만들어 6억대 범죄 수익 세탁한 30대 구속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벌어들인 6억 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광양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 B씨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해당 법인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체된 자금은 수표로 인출된 뒤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흘러들어갔으며, 범죄 조직은 이를 다시 상품권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 B씨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키는 데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귀국한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고, 이후 두 달간의 추적 끝에 최근 울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정유철 기자

## 여직원 4명 성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서 부인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 4명을 상대로 반복적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곤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자신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유철 기자

## 재선거 앞두고 ‘허위 지지 선언’ 유포한 단체회원 벌금형

전라남도의 한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단체 이름으로 허위 지지 선언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모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B씨 지지와 관련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체 내부 논의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은 벌금 3000만 원이지만, 허위 선언이 실제로는 B씨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 북구, 청년 푸드 힐링 프로그램

다.

광주 북구청 청년정책팀 청년 직원들이 16일 북구 행복 어울림센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라운지에서 열린 푸드힐링 프로그램에서 초코 버터링 쿠키를 만들고 있

광주 북구 제공

## 해남 원숭이체험관서 1마리 탈출… 마취총 쏘 6분만에 포획

전라남도 해남군 원숭이체험관에서 원숭이 1마리가 탈출했지만, 소방 당국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포획했다.

16일 해남소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32분께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 원숭이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원숭이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휴양림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마취총을 이용해 작전 시작 6분만에 원숭이를 잡았다.

포획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숭이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나머지 14마리의 원숭이도 다치지 않았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해남소방 119소방대원이 지난 12일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 원숭이체험관에서 탈출한 원숭이를 포획하고 있다.

해남소방 제공 연합뉴스

위해 화재 진압을 비롯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

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 영광 대마산단 보조금 45억 가로챈 60대, 징역 8년 선고

### 허위계획서로 지자체 속여 “지방재정 훼손, 중형 불가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영광군의 투자보조금 45억원을 받아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

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2017년 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4월 영광 대마산단에 군만두 제조공장을 짓겠다며 49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나씨는 당시 약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 허위 기재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예산은 토지 지분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됐다.

영광군이 나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편성된 전체 보조금 90억2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행위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